

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
(윤영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8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. 9. 21.

발의의원 : 윤영애 의원

강성환 의원

김성태 의원

김지만 의원

이시복 의원

이만규 의원

황순자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10년간 대구지역에서는 3cm이상의 대설이 총 8번 발생하였으며, 올해는 이례적으로 3월 8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7.5cm의 기습 대설이 발생하여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. 이에 설해를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해소 및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고자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설해방지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대설시 출근·등교시간 조정권고 대상 기관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출근·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해당하는 대설기준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6조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하여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중 대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대설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민의 책무) 시민은 대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내 집 앞, 내 지역 제설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출근·등교시간 조정 권고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출근·등교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구 시 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
2. 민간기업
3. 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제6조(출근·등교시간 조정 권고기준)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도로상황, 기온변화,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.

- ① 기상청의 대설특보 예보 및 발효되는 경우
- ② 전일 대설로 인해 다음날까지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③ 당일 오전 7시까지 3센티미터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되는 시점에 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,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안전문화 활동,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, 모든 국민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(중략)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자연재해대책법]

[시행 2018. 4. 17.] [법률 제15344호, 2018. 1. 16., 타법개정]

제3조(책무) ⑤ 시장[특별자치시장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(이하 "행정시장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, 주민 교육·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7. 3. 21.>

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(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,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14.>

1.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
2.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
3.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·관리 및 장비의 확보
4. 고립·눈사태·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·관리
5.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·관리
6. 설해대책 교육·훈련 및 대국민 홍보
7.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
8.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
9.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14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